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역산업정책을 중심으로 -

2017. 09. 13

주관 : 충남연구원

주최 : 지역발전위원회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 워크숍 개최계획

□ 개요

- 주제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역산업정책을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17. 9. 13(수) 15:00~18:00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4층)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 용
15:00~15:10	개회	인사말 :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15:10~15:40 (' 30)	발제1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 장재홍 박사 (산업연구원)
15:40~16:10 (' 30)	발제2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현황 : 강정훈 팀장(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6:20~17:50 (' 90)	지정토론	김성진 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근호 교수(청주대 산학취창업본부) 백운성 부장(충남연구원) 윤철석 단장(경북TP 정책기획단) 이경미 단장(충북지역사업평가단) 한무호 교수(순천향대)
17:50~18:00	종합정리	좌장 :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발제 1.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장재홍 박사
(산업연구원)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2017. 9. 12.

장 재 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한국지역정책학회 명예회장





Contents

I 기본 관점

II 새 정부의 지역정책 관련 공약 및 사업 검토

III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

1. 정책 목표(Goal & Objectives)
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4. 낙후지역 인구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기본 관점

I-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목표

-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여러 정책 영역 중 과연 다른 정책 영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대상, 목적, 역할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
 - 지역정책 고유의 정체성은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1차 준거가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함.
 - '지역'이라는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정책의 대상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이어야 하고 서로 이질적이어야 함.
- 지역정책 차별화의 범주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과 지역별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구분
 - 전자는 국가 지원 규모의 차등화 즉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서로 다른 지역별 상황(regional profile)에 맞춘 정책조합(policy mix)의 차별화를 의미
 - 지역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국가 정체성, 결속 강화)
 - 지역별 효율성 측면의 중앙정부 개입은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I-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이나, 지역 간 격차의 해소 및 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정책조합이 필요(EU, OECD)
 - 지역 간 격차의 정태적·직접적 해소를 위한 정책과 낙후지역의 발전 잠재력 강화를 통한 동태적·우회적 수렴 정책(Catching-up & Convergence)으로 구분 (OECD 2016, 장재홍 2008, 2012)
 - 지역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은 동태적·우회적 수렴 정책에 해당되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은 양자 모두에 관련
 - 지역정책은 최근 정태적 균등화에서 동태적 수렴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행
- 장소기반정책과 지역정책은 대부분 겹침.
 - 다만, 전자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선진지역을 우선할 수도 있으나, 지역정책 관점에서는 그러한 정책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장재홍, 2016)

I-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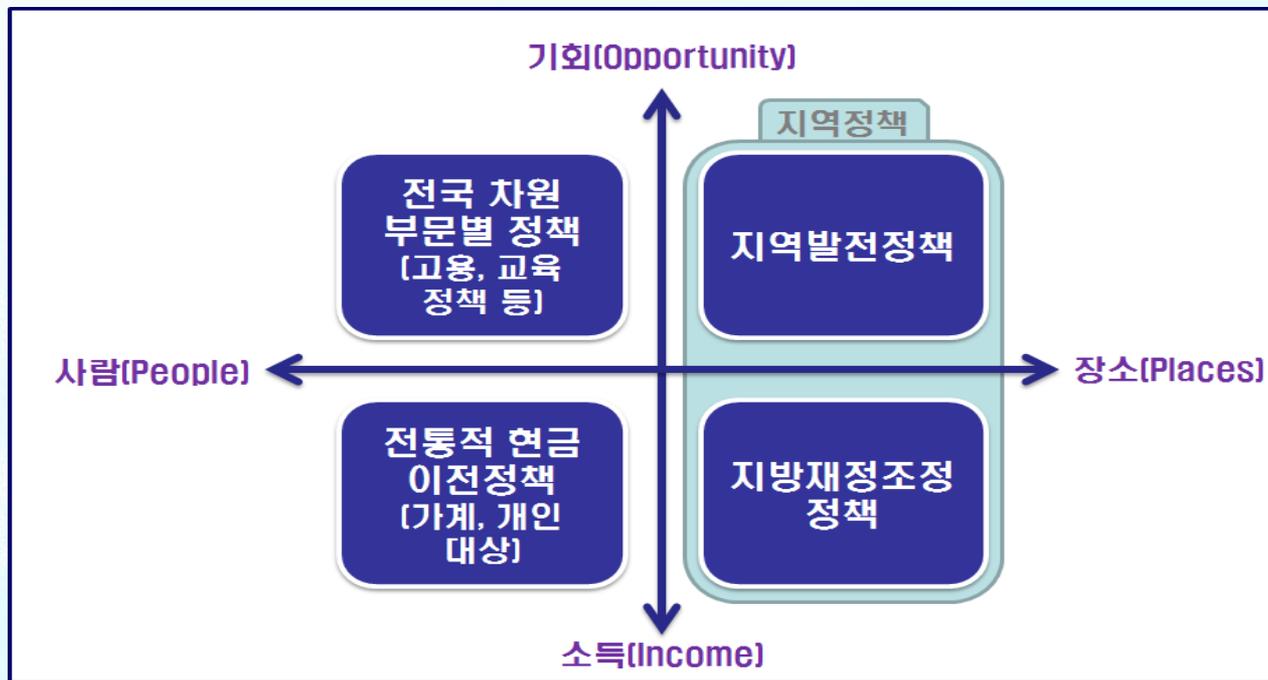
지역정책, 지역발전정책, 지역산업정책

- 정책 대상을 장소와 사람, 정책 목표를 기회와 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사람-기회 조합은 고용, 교육, 과학기술정책 등 부문별 정책, 사람-소득 조합은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금전적 재배분 정책(사회적 형평정책), 장소-소득 조합은 지방재정조정정책의 영역이며, 장소-기회의 조합이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장재홍, 2012, 2014).
- 지역정책은 지방재정조정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현재의 지역 간 소득(재정력) 격차 보전을 위한 단기적 자원 이전 정책을, 후자는 낙후지역의 미래 소득(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역량 확충정책을 의미함(장재홍, 2012, 2014).
 - 낙후지역이 아닐지라도 중앙부처가 지역별 발전을 위한 정책 개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가 지역에 비해 종합적 정책 역량(재원, 행정, 정보 역량)이 더 낫다는 전제, 즉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근거하는 것임.
 - 우리나라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의 지역정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지역발전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지역별 패키지형 정책 기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I-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지역산업정책이 지역발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지역산업정책의 정의는 장재홍 외, 2002) 참조)
- 지역산업정책은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수단은 과학기술, 인적자원, 지구 지정 등 타 부처 소관 영역도 많아 통합적 기획, 추진이 바람직함.

<정부 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 영역>



자료: OECD(2012)를 장재홍이 일부 보완, 장재홍(2012) 재인용

I-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한국에서의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필요성

❖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

- 지역 내 문제 해결 주체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이지만 아래와 같은 지역 간 격차의 조정 및 해결 주체는 지역보다 상위의 행정조직일 수밖에 없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중추기능(언론, 금융, 교육, 정치) 격차
 - 시·도 간의 경제성장, 혁신역량 격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간의 경제 및 생활 여건 격차

❖ 지역 간의 재정력 불균등 구조

- 헌법적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선진지역으로부터 징수한 세수를 낙후지역에 투입하는 지방재정조정이 불가피

❖ 중앙-지역 간 정책역량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고유 정책영역 온존

-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2000년대 이후의 지역정책 기획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
- 그간 지역의 정책 기획, 추진 역량이 급속히 향상되어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국책 과제의 입지 결정, 지역 간 경합 사업의 조정, 경제발전 자원의 지역 간 배분 등 중앙정부의 고유 정책영역은 여전히 존재

I-2. 중앙정부 정책 개입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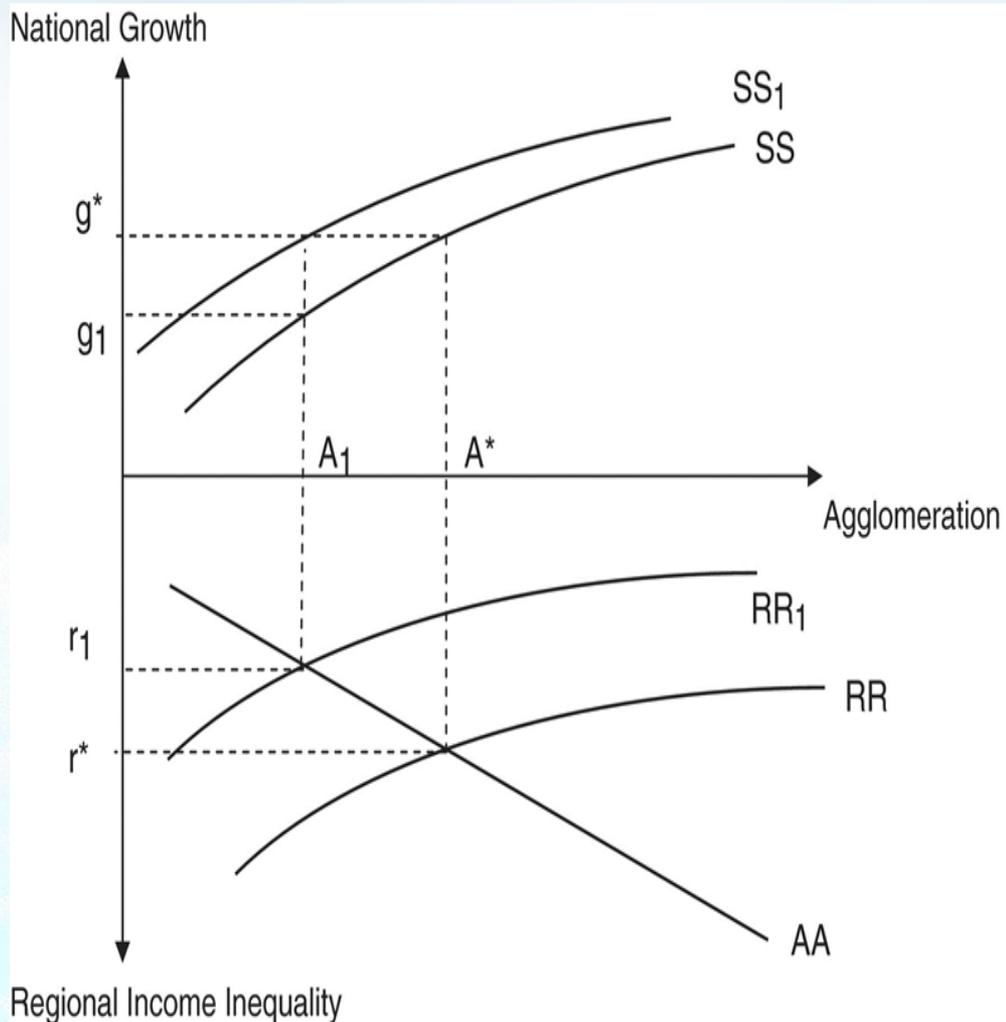
- 경쟁 제한적 시책, 사업 배제(**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중시
 - 경쟁 이전 단계(pre-competitive stage)에 지원 한정
 - 신산업, 신기술, 신제품, 신지역 위주의 시책은 배제성이 낮음
(슌페터적 혁신과 창업의 중요성, 영국 EZ 사례)
- **정책효과**의 공공성(publicness), 부가성(additionality) 중시
 - 지식기반 확충, 혁신역량 강화 등
 - 동일 대상지역 내 인접 장소로의 투기성 위치이동(displacement) 유발 시책 지양
- 정책 **기획/집행/평가과정**의 중앙-지방간 및 지역 상호간 보충성(subsidiarit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파트너십(partnership) 중시
- 유치산업(기술), 성장산업(기술), 성숙산업(기술)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추구
- 중심 대도시, 산업도시, 농산어촌별 **맞춤형** 정책 조합(policy mix) 추구

I-3. 동태적 지역균형발전 중시

- “잘 하는 지역(예: 수도권)에 지원을 집중하고, 그 낙수효과를 낙후지역에 파급시키거나 사회복지 관점에서 시혜를 베풀자”는 주장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은 논리이며, 지역정책의 정체성 무시(지역정책의 논거 부정)
 - 잘 하고 있는 지역에 왜 정부가 개입하나?
 - 지역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헌법 3개 조항에 명시)
 - EU(2012)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주변부의 성장속도가 더 높음.
 - 런던권 경제발전의 영국 내 타 지역 파급효과는 거의 없음.(P. McCann, 2016)
-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이용가치가 없는 사막이 아니며**, 오랜 기간 국가의 투자가 비켜갔을 뿐임.
 - 이스라엘의 발전 사례
 - 울산, 포항, 구미, 광양도 국가공단 조성 이전엔 낙후지역
 - ICT+청정 자연환경+1인 가구 및 은퇴자 급증: 낙후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
- 4차 산업혁명, ICT, 소프트웨어 등 오늘날의 주류인 Footloose Industry의 성장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입지 제약은 크지 않음.
 - 일본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초의 사례(인구 7,000명의 산촌이 창조산업 거점화)
 - 입지조건이 아닌, **국민 의식과 정부 정책의지의 문제**

I-3. 동태적 지역균형발전 중시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동태적 조화 가능성



집적, 지역 간 격차, 국가 경제성장 간 관계와 지식확산/혁신의 효과

(주)

AA: 집적과 지역 간 소득격차의 Trade-Off 곡선

RR: Competition & Congestion Effect 곡선

SS: 집적경제효과 곡선

※혁신을 위한 지역 간 지식확산은 $SS \rightarrow SS1$ (g^* 를 유지하면서 $r^* \rightarrow r_1$)

(자료) B. Gardiner, R. Martin & P. Tyler, 2011, 장재홍(2012) 재인용



새 정부의 지역정책 관련 공약 및 사업 검토

Ⅱ-1.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

● 공약 6: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고향사랑기부제도,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자치부, 미래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립,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
- 혁신도시 시즌2(혁신클러스터 육성,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노후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전환, 산단 내 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 살기 좋은 농산어촌(청년농, 귀농인, 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등)
- 유희항만을 이용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 공약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 지역 간 의료양극화 해소
-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등)

● 공약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균형지수 개발 및 낙후지역 우선 지원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II-2.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 도시재생 뉴딜사업(공약)

- 매년 10조원씩 5년 간 공적 자원 투입
-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 지원,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생활복지주택) 건설, 노후주택을 정비 또는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원도심·전통산업집적지·재래시장 정비

● 수혜 지구의 수도권 집중 가능성

- 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대상 지구 수 분포: 61개 중 45개(74%)가 수도권(서울 33, 인천 2, 경기 10)

● 성과 평가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유리

- 압도적으로 큰 미래 수요 규모
- 공급자(설계·시공·감리자) 확보 및 규모의 경제 구현 용이

● 공적 자원의 지역 간 배분 원칙 사전 설정 필요

- 공적자원 투입의 수도권 편중은 젠트리피케이션(민간자본 유입)과 상승작용하면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젠트리피케이션 억제와 사업 효과와 상충 관계)
-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최소 50% 이상 비수도권에 배분 필요
- 일자리 창출부문보다 지역정책 부문의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II-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 지방분권 강화 시책(공약)

-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대통령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참여)
-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이양(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
-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 제도 개선

●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의 3개 조건

- **조건 1**(상대적, 조건 2, 3에 의존): 낙후지역의 가용 재원이 현재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조건 2**(절대적, 지역별 효율성): 정책 효율성, 효과성이 현(중앙정부 주도) 시스템보다 커야 한다.
- **조건 3**(절대적, 지역간 형평성): 낙후지역의 정책 효율성, 효과성이 선진지역에 비해 커야 한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 지방분권은 정치시스템상의 권력 점유 문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정책 목표
- 현 조세·재정시스템 하에서는 조건 1의 충족이 거의 불가(법인세의 69.4%가 수도권에서 징수)
- 지방분권론자의 주장은 조건 2 관련(시책별 보충원리, 대응원리 검토 필요)
- 세밀한 이행과정 관리, 조세·재정시스템 개선(법인세 수입의 사업장 소재지별 배분 등) 필요

Ⅱ-4.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 중소기업부 신설(공약)

- 지역산업 육성 시책 주관(예정)

● 지역균형발전과의 상충 가능성

- 2015년 법인세 납부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 소재
- 중소기업부 시책의 주고객인 수도권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 중소기업부, 산업부, 미래부의 분업 및 협업 체계 확립 필요

- 단기적, 현상 개선(기업지원) 시책: 중소기업부
- 중기적, 지역 신산업 육성, 투자 유치, 글로벌화 촉진 시책: 산업부
- 장기적, 미래 지역 혁신역량 확충 시책: 미래부
- 3개 부처 상호간 및 교육부, 노동부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Ⅱ-5. 종합 의견: 정합성 있는 지역정책의 기본 틀 마련 필요

●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새정부 4대 국정 목표 중 하나

- 문재인 정부 정체성에 직결된 가치체계(cf. 일자리 창출: 이전 정부와 공통)
- 타 부문의 시책 기획 시에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 현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체계와 역점 사업들 간에 정합성이 부족
- 정치시스템 개편(지방분권)과 국가 정책 목표(지역균형발전) 설정은 별개의 영역이며, 前者는 後者의 제약요인이 됨. 전자 개편 시 후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 지역정책의 정합성,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관련 시책, 사업들을 지역 및 장소 기반으로 재분류, 통합, 체계화
-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이슈들을 계획에 담을 필요(표장 참조)
-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세밀한 과정 관리 방안 강구, 실천
- 폭넓은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 전략 마련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

Ⅲ-1. 정책 목표(Goal & Objectives)

최상위 목표(Goal): “ 활기찬 지역경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

◆ **중간 목표(Objectives):**

-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Balanced Development)
-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Smart Growth)
-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Inclusive Growth)
-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New Governance System)

【채택 이유】

- 최상위 목표의 “활기찬 지역경제”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란 지역 내 주체 간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포용적 사회 발전을 내포
- 중간 목표의 “국토 신발전 축 및 거점 형성”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을 공유하는 목표이며,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는 주로 효율성 측면,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은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 목표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
- EU를 비롯한 세계적 정책 동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과 OECD(2016) 등의 제언(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과 부합

Ⅲ-1. 정책 목표

【예상 논쟁점】

-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은 수도권 억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자원 투입 증대 중심
- 지역별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 간의 상충 가능성
 - 낙후지역의 추급(catching-up)을 통한 동태적 수렴 추구가 필요
- 낙후지역이란 일정한 기준 이하의 인구밀도, 생산, 소득, 생활수준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들

Ⅲ-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1) 채택 이유 및 예상 논쟁점

【채택 이유】

- 수도권 일극 집중 공간구조의 시정
 -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 정치, 금융, 언론, 교육 권력의 대부분이 집중
 -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의 작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된 자산으로 국토 이용의 장기적·총체적 효율성을 크게 저상시킴.
 - 추가적 수도권 집중은 누적적인 집적의 불경제 야기
- 동서 간 연결성 제고로 국토 전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지역 간 포용 및 결속 증진
- 지방 분권을 위한 물리적 기반 확충

【예상 논쟁점】

- 단기적 관점에서의 반론(재원 부족, 낮은 B/C Ratio 등)

Ⅲ-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2) 전략 및 정책과제

◆ 국토개발 부문 : 동서축 보강을 통한 국가 통합 SOC 구축

- 수백 년간의 수도권 일극 지향적 남북축 교통인프라 구축은 완성 단계
- 미래 국가 발전 잠재력의 획기적 향상은 동서축 연계 인프라의 확충이 관건
 -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2시간대에 직결시키고, 향후 북극항로와 연결함으로써 획기적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 3대(북부, 중부, 남부) 동서축 발전 벨트와 기능적 경제권(Functional Economic Area: FEA) 단위의 교통, 용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역점 ⇨ 3×2 국토공간 구조
 - 이명박정부의 내륙벨트, 3대 해안벨트는 단순한 지리적 연계 구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균형발전 효과 미미
- 지방분권의 물리적 토대 구축
 - 수도권 편향성 탈피, 지역 간 다양한 자율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맥 상통
 - 무주-대구 고속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간),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간)
- 아울러 경제권역별 SOC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순환구조 확충 및 권역 내 이동성 제고 필요

Ⅲ-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 문화관광부문 : 5대 통합 문화관광권(국토 5극 문화관광 공동체) 육성

- 수도권 일극 중심의 내·외국인 유입 구조 혁파
-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하여 권역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내·외국인의 다극적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 수도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제주권
 - 기존 산악벨트, 해양관광벨트, 거점개발 사업은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및 경제적 성과 미미

Ⅲ-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적 결속(cohesion) 강화

- 3대 지표(인구밀도, 1인당 소득, 1인당 GRDP) 기준 지역 간 지원 차등화
 - 인구밀도는 산지, 내수면 면적을 제외한 가용(주거용, 산업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
 - 보충원리와 대응원리에 입각, 시책 특성(적정 거버넌스체계 및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에 맞추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평가 및 지원 추진
- 기능적 경제권 관점의 특화된 4차산업혁명 거점 조성(지역산업정책에 반영)
- 비수도권 산업(기업)의 혁신·글로벌화 역량 강화 지원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조세감면(지역산업정책에 반영)
 - 영국 Enterprise Zone(EZ)의 자본투자세액공제(capital allowances) 참고
- 사회적 할인율 인하 및 지역 간 차등 적용
 - 현 5.5% → 4% 선으로
 - 순수 국가공공재 4%, 수도권 사업 4.5%, 비수도권 사업 3.5% 적용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1) 채택 이유 및 예상 논쟁점

【채택 이유】

-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도시·농산어촌정책의 분절 및 지역 특성 반영 미흡, 지역 및 민간의 자주적 역량 도출 미흡
- Picking winners형의, 시장경제원리를 침해하는 시책 추진의 부작용
-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스마트전문화 추진이 바람직

【예상 논쟁점】

-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고착된(locked-in) 중앙부처 정책 수립, 집행 관행의 탈피가 가능할까?
- 스마트전문화 기반 혁신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침 작성,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2) 접근방법: 한국형 스마트전문화 추진

- 스마트전문화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산업정책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시장기능 왜곡, 도덕적 해이 초래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됨.
- 스마트전문화론은 세계 유수의 지역정책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EU가 공인한 것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지역정책 대안들 중 가장 보편타당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정책 대상 공간범역의 크기나 지원 대상 분야(산업, 기술, 활동 등)를 불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에도 그 기본 논점과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3) 전략 및 정책과제

(1) 지역 · 산업 발전단계별 다층적 혁신 활성화

❖ 국가미래전략 신기술·신산업 육성(Global TRL 1~3단계)

- 전국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별 최적 입지 선정(National-Sectoral approach)
- 전국적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지적 플랫폼 기능
- 중앙부처가 기획, 집행, 평가를 주도
- 관련 중앙부처(산업부, 미래부, 교육부, 노동부) 합동 기획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 광역 성장주도부문 육성(Global TRL 4~8단계)

- 광역경제권, 중추도시권, 지역산업권 단위의 Regional-Functional approach
- 스마트전문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분야별 전진기지(글로벌 경쟁거점) 구축 추진
 - 주력 분야 선정은 연접 지자체들의 자율 협의 존중
- 그 외에는 특정 산업 지정을 지양하고(국가미래전략산업, 구조조정산업, 지연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대상), 스마트전문화를 통한 혁신 활성화에 역점
 - 광역지자체 단독 및 연접 광역지자체 연합 추진으로 2원화
 - 연관 다각화, 융합, 혁신생태계 구축
 - 범용 핵심기술(IT, 나노, 신소재 등)과 기존산업의 접합, 융합, 혁신생태계 육성 등
 - 국가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 혁신 관련 하드웨어(연구개발 시설·장비, 산업단지·특구, 광역교통시스템 등) 구축은 연접 광역지자체 연합 사업 중심
 - 광역지자체 단독 사업은 창업·기업유치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역점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 구조조정 지역·산업 활성화(Global TRL 9단계)

- 당해 산업 입지지역(당해 및 연접 기초지자체) 대상의 Multi-level Sectoral approach
- 회복력(resilience) 강화, 산업 재생, 고용 대책, 구조 변화에 역점
-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역할 분담체계 구축
 -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소비 감소, 실업자 증대, 인구 유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강구

❖ 낙후지역 산업발전 기반 구축(Global TRL 7~9단계)

- 단일 기초지자체 또는 2~5개 기초지자체연합 단위의 Local-Functional approach
- 지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향토산업 및 지역 자원의 6차산업화 촉진
 - 지역 토착형 제조업, 서비스업의 혁신 활성화 및 연관 다각화 촉진
 -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microenterprise) 육성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 낙후지역 산업발전 기반 구축(Global TRL 7~9단계)(계속)

- 국가 지원 균형발전특별산업단지 조성(비수도권 낙후지역 대상)
- 인접 대도시, 산업도시와의 연결성(connectivity) 강화, 글로벌화 지원
- 광역지자체가 조정(coordination) 및 지원(support)
- 기초지자체의 산업육성 추진 역량 강화가 선결조건
- 소요 국비 전액 시군 포괄보조, 낙후도에 따른 차등 지원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2) 지역(권역) 내 경제·산업 순환구조 확충

- ❖ **기능적 경제권(중추도시권, 지역산업권 등) 관점의 “강한 연계(strong ties)”망 구축**
 - 소프트 인프라와 하드 인프라 병행 확충
 - 도시계층 간 상보적 발전 시스템 구축
 - 지식 창출-확산-활용, 상품 및 서비스 거래, 투입요소 수급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효과 추구
- ❖ **인적자원, 지식자원의 기능적 경제권 차원 Pooling 및 이동성(mobility) 제고**
 - 낙후지역에 외국 전문가/근로자, 국내 은퇴 전문가/근로자 유입 촉진
 - 지역별 통근권 확대를 위한 교통시스템 정비·확충
 - 산업·과학·기술인력 수급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 인구규모에 상응하는 지방 대도시의 역량 강화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점 육성(혁신지구, 비즈니스지구, 금융타운, 의료지구 등 조성)으로 지역 기업 및 주민의 수도권 의존도 완화
- 권역 내 인재공급 및 글로벌화 허브 기능 확보(중추대학 육성, 공항·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등)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관 다각화(related variety) 지원
- 산업구조 재편·고도화(industrial restructuring)
- 구조조정 인력의 재훈련, 재취업 기회 확대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3) 효율적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권역 내 산업지원 시설, 기관 운영상 규모의 경제 구현

- 조직체로서 지원서비스 생산 및 공급상의 규모의 경제 구현, 연관다각화·융복합화에 대응
- 각종 R&D 지원기관의 통합적 운영

❖ 스마트전문화 추진 기반 정비

- 중앙부처 차원의 추진 기구 및 제도 정비, 매뉴얼 작성
- 지역(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원의 추진기구 및 프로그램 정비

Ⅲ-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 기업가적 발견을 위한 관민협치 거버넌스(Quadruple Helix) 구축

- 기업가적 발견은 민간 주도과 참여를 하나, 우리는 유럽과 달리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과도기적 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를 통해 이런 역량 부족을 보완 필요
-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촉진, 지방정부 및 TP의 역량강화, 민간협치 모델의 보급, 중앙정부의 지역컨설팅 강화 등이 필요

❖ 스마트 전문화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 EU의 스마트 전문화론에서 평가와 모니터링은 회계감사의 장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 간의 학습의 장임(EU, 2012)
-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중앙부처의 칸막이식의 집권적 사업관리와 양적 지표 중심의 형식적인 '시장관리주의'(market managerialism)의 극복 필요

Ⅲ-4.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1) 채택 이유 및 예상 논쟁점

【채택 이유】

- 농산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특히 청장년) 감소 및 고령화 대응
- 낮은 기회비용 요소(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거점 구축

【예상 논쟁점】

- 낙후·과소지역의 선정 기준, 방법, 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 필요
 - EU 모델 참고 가능
- 낙후·과소지역의 인구유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

Ⅲ-4.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2) 전략 및 정책과제

① 한국형 지방재활성화 전략(Local Revitalization Strategy) 추진

- ※ 1차 목표: 인구 유지, 정주체계 안정화로 지방소멸 예방
- ※ 2차 목표: 고용 및 소득 창출 기반 강화로 인구 유입 유도
- ※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등 참조

📦 인구 유지

- 한국형 지방재활성화전략 (Local Revitalization Strategy) 추진
- 5070 세대 은퇴인력의 귀촌 및 현지 취업 촉진
 - 기업·공공부문에 대한 자문, 네트워크 에이전트 및 플레이스 마케터 역할 강화
- 청장년 인구 순유입 및 정착 촉진 방안 강구
- 사회적 기업 육성

Ⅲ-4.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 혁신 친화적 지역 만들기

- 기초지자체의 산업육성 및 혁신 활성화 시책 추진역량 강화
- Local Quadruple Helix 구축
 - 지역 산·학·관·민 주체 간 파트너십 함양, 기업가정신 및 혁신친화적 주민 의식 함양 등
- 별도 프로그램과 자원 마련 및 낙후도에 따른 차등적 포괄 보조금 지원

Ⅲ-4.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 국가 지원 균형발전특별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화 추진

- 비수도권 도(道)별 낙후지역 1 곳을 국가 지원 균형발전특별산업단지로 지정
 - 기초지자체 단위(단수 또는 복수)(기존 농공단지는 규모의 경제 구현 미흡)
- 기업 유치·창업 촉진,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산업(기업)의 혁신·글로벌화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조세감면, 글로벌 마케팅/스카우팅/서칭 지원, 지원기관을 연계한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
- 영국 Enterprise Zone(EZ)의 입지 선정 원칙(displacement 예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Clean Site에 지정)과 자본투자세액공제(capital allowances) 등의 지원 시책 참고

❖ 부족한 생산투입요소(특히 인적자원) 확충

- 기숙사 등 산업인력 정주기반 개선과 병행
- 외국인 정주기반 확충
- 주변 대도시, 산업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 촉진

- 낙후 농산어촌 주민에게 혁신 성과 향유 기회 확충
- OECD(2017), MIT의 IIC(Inclusive Innovation Challenge) 등 벤치마킹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1) 채택 이유 및 예상 논쟁점

【채택 이유】

- 전술한 3대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관행의 탈피와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 보충원리와 파트너십에 입각한 추진기구, 추진체계, 계획 수립 및 정책 사이클 단계별 지침 마련
- 실질적 지역 주도, 투명성·책임성,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정책 사이클의 총체적 효율성, 효과성 향상
- 정부 예산절감, 유사중복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임계규모(Critical Mass) 형성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예상 논쟁점】

- 지방분권 추이,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 여하에 따라 독립 거버넌스 기구 설치, 지자체간 연합(일본 모델), 중앙부처의 조건부(conditionality) 프로그램(EU의 스마트전문화 모델) 운영 중 선택 또는 혼합(mix) 운영
-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고착된(locked-in) 중앙부처 정책 수립, 집행 관행의 탈피가 가능할까?
-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침 작성,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행정단위가 광역시도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여건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별도의 대도시권 또는 광역경제권을 설정, 광역경제행정기구 설립은 가능할까?
- 유럽의 스마트 전문화나 일본의 지방창생 사례: 기술, 활동이나 클러스터 범위에 따라 다양한 지역단위를 지원대상으로 함(일본 경우 배분 비율 도도부현 4 對 시정촌 6)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 계획의 단위와 분야

- 지역창생계획; 광역지자체(시·도)단위 계획 + 기초지자체(시·군)단위 계획
 - 계획의 분야는 일본의 지방창생계획 참조
- 지역혁신계획: 목표는 스마트한 성장과 혁신 활성화
 - 지역별로 다양한 과제와 해결방법에 대응하여 계획 평가-> 포괄보조금 및 일반보조금의 메뉴식 지원
 - 예) 충남, 울산 등 기존산업 전문화 지역 ⇒ 산업다각화 중심의 계획 / 전북, 전남, 강원 등 뚜렷한 특화산업이 없는 지역 ⇒ 산업집적과 전문화 중심 계획
 - 예) 광역: 첨단 산업 창출, 시군: 연고, 전통산업 및 농수산업 중심
 - 일자리, 산업발전, 중소기업 지원, R&D의 통합적 지원
 - 예산배분 ; 광역단위 계획 5: 시군단위 계획 5로 배분
 - ⇒ 기존 지역산업진흥계획은 광역 시도 내에서도 성장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낙후지역은 배제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부, 중소기업부의 역할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 장기 정책기조 정립, 5개년계획의 목표와 전략 수립, 정책기획·집행·평가에서의 부처간 역할 조정
- 산업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 신산업 육성, 미래 산업발전기반(인프라, 신기술, 인재) 확충, 4차 산업혁명의 권역별 거점 형성, 지역산업 구조 조정 및 글로벌화 촉진, 지역간 산업진흥 협력 촉진
 - 기존 산업군(주력, 특화)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산업 타게팅은 지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적 정책 지원 needs(애로 기술, 경영일반, 자금난 해소, 고용 및 숙련 향상 등) 충족, 벤처 창업 활성화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주체의 연계와 통합화

- 전국에 테크노파크(17개), 지역특화센터(61개), 지역혁신센터(127개), 지자체 연구소(19개), 출연연의 지역분원(6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단 클러스터 등 13개 시도에 약 550여개의 기관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연계 또는 통합화 추진
 -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지원, 혁신 활성화, 산업고도화와 지연산업의 육성, 지식생태계의 임계치 확보 등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광역 시·도와의 협력적 차원에서 연계 또는 통합하여 관리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정책을 실행 및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으로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자립화를 유도함.

Ⅲ-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 Quadruple Helix 모델 구축: 산·학/연·관 + 민(수요)

- 산학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요자,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협력관계
 - 잠재적 고객의 참여를 통해 이익집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의한 의사 결정 방지
- 협력적 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의 형성과 상호학습
 - 기업가적 발견과정의 활성화
 - Boundary spanner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정·중개 역할 수행



감사합니다

발제 2.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현황

강정훈 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위
사업현황보고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7. 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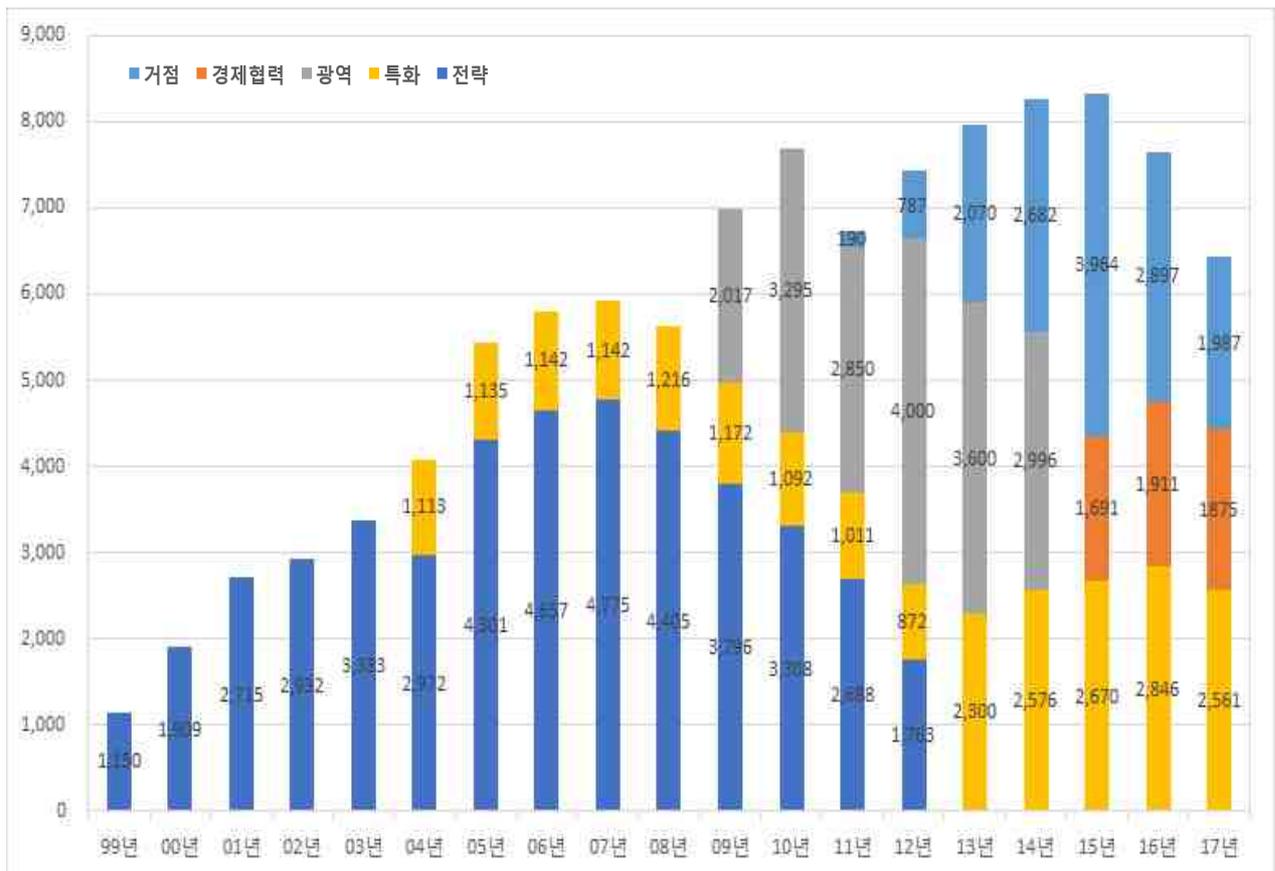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 역 산 업 단

I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개요

1 목적 및 개요

-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
 - 지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대표산업을 선정('16년 현재 14개 시·도 102개 산업)
 - 지역·산업을 타겟팅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유도
 - 국가의 산업육성과는 별개로 「균특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며, 총 10.7조원의 예산을 투자(국비 기준, '99~'17년)

〈그림 1〉 지역산업지원사업 예산투자 추이 ('99~'17)



※ 출처 : 산업부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예산(각 연도)

2

지역산업육성R&D의 특징

-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

〈표1 중소기업 지원R&D의 지원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소계
중기R&D	8,512	8,801	9,786	9,472	36,571
비수도권(%)	4,169(49)	4,345(49)	4,720(48)	4,617(49)	17,851(49)
주력R&D	564	841	774	806	2,986
비수도권(%)	564(100)	841(100)	774(100)	806(100)	2,985(100)

- (특성화 발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간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을 통한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역 자율로 지역여건, 산업현황, 기업특성 등을 반영한 대표산업* 선정·육성
 -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기준(KSIC 5 digit)으로 지원분야를 설정, 지원 대상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별 선택과 집중 투자
- (경제활성화) 과제의 혁신성과 보다는 매출, 고용 등 기업성장과 일자리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
 - * 지역산업육성사업 R&D는 신규채용(2억원당 1명) 조건부 R&D지원
- (지역중심) 지역 자율성을 추구하는 균특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시·도가 중심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통해 과제를 관리
- (사업연계) 지역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별 진흥계획을 통해 사업간 연계를 촉진
 - * (특화사업) 지역내 기업성장·고용창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간 기업협력 촉진·규모의 비즈니스 촉진, (거점사업) 지역내 연구기반 연계
 - 특화사업과 경제협력권 사업의 특징을 살려 융합R&D, 사업화 신속 지원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
 -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여건, 기업수요 등을 반영한 R&D사업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과제수행, 평가, 사후관리 등 지역 자율의 성과환류시스템 가동 중

- (국민의 정부) 산업입지 뿐 아니라 R&D, 기업지원서비스,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총 0.87조원)
 - 부산(신발), 경남(기계), 광주(光), 대구(섬유) 등 4개 지역 4개 전략산업
- (참여정부) 지역의 자립형 성장 기반 확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전략산업을 확대·추진하고 산업기반 확충에 주력(2.46조원)
 - 지역전략산업을* 통해 시·도 중심의 산업육성체계를 확립하고, TP,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기술지원기관 설립·연구장비 확충
 - * 비수도권 13개 시·도별 4개 내외로 총 43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연고자원 활용한 특화산업 도입
- (이명박 정부)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매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3.55조원)
 - * R&D,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중심, 국가신성장동력과 연계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5+2 광역경제권 단위의 선도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간 협력을 통한 광역연계사업도 추진
 - * 1단계 선도사업('09~'12) :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신성장동력)
 - 2단계 선도사업('12~'14) : 22개 선도산업, 40개 프로젝트(신성장동력+고용창출)
- (박근혜 정부) 지역이 공감하고, 주민도 체감할 수 있는 산업육성을 위해 시·도에 뿌리를 둔 고용창출형 산업에 집중(3.12조원)
 -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모든 지역 산업을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도의 기획·평가
 - * '15년도부터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산업거점사업을 진흥계획에 포함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화산업(주력산업, 연고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산업거점기관사업을 추진
 - (특화산업) 지자체별로 부가가치·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여 추진

〈 표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구분	정책대상	사업목적
주력산업	시·도	63개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매출 등 신장 유도
연고산업	시·군·구	시·군·구별 특화품목 육성으로 주민체감형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연계사업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협력산업) 시·도가 자율적으로 경제협력권을 구성하여 시·도간 협력이 효과적인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육성(16개 프로젝트)
- (거점사업)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
- 특화발전 프로젝트('14), 창조경제('15)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사항을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

〈그림 2〉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변천과 예산투자 현황

구분	'99~'02(DJ정부)	'03~'07(참여정부)	'08~'12(MB정부)	'13~(박근혜정부)	
지역간			1단계광역선도 (총 9,162억원, 산업(20)당 연153억원) R&D 6187, 비R&D2975	2단계광역선도 (총 1조595억원, 산업(40)당 연 88억원) R&D 8112, 비R&D 2483	경제협력권사업 ('15년부터 총 5,477억원, 산업(17)당 연107억원) R&D1,234, 비R&D456
시·도	4개 지역 1단계('99~'03) (총7,023억원, 산업(4)당 연351억원) R&D 1,930억원, 인프라 3,302억원, 기업지원 1,791억원	4개 지역 2단계('04~'08) (총 9,496억원, 산업(15)당 연127억원) R&D 5,136억원, 인프라 3,045억원, 기업지원 등 1,315억원	Post 4+9 지역 전략산업 (총 1조 5,959억원, 산업(44)당 연73억원) R&D 7,179억원, 인프라 4,616억원, 기업지원등 4,162억원	주력산업 (15년부터 총 6,340억원, 산업(63)당 연33억원) R&D 3,273, 비R&D2,783	신특화 (총 4,876억원, 산업(62)당 연41억원)
시·군·구		9개 지역 1단계('02~'07) (총 7,407억원, 산업(29)당 연43억원) R&D 1,761억원, 인프라 5,193억원, 기타 453억원	지역 특화산업('04~) (총9,953억원)	지역연고산업 (총1,656억원)	
광역거점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총 14,649억원)	

※ 출처 : 지역지원R&D의 효율화 방안('15.10, 산업부 내부자료)

지역산업육성사업 (2017년 4,436억원)

(R&D 3,182억원 기평비 146억원포함, 비R&D 1,254억원)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1,875) (R&D1,392_기평비64, 비R&D419)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561) (R&D1,644_기평비82, 비R&D835)		
공간	시·도 간 협력(1,811)	시·도(2,020)	시·군·구(459)	
R&D	경제협력권분야 비즈니스 협력형(1,392)	주력산업분야 고용창출형 과제(1,185)	① 전통산업육성(385) - 풀부리(277) - 연고산업(63) - 혁신센터(45)	
비R&D	경제협력권분야 기업지원(419)	주력산업분야 기업지원(835)	② 공공기관연계(74)	

□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억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추경예산)	'17년 (기평비)
I.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3,850	4,000	3,600	2,996	-	-	-
II. 지역 전략산업 육성	2,688	1,763	-	-	-	-	-
III. 지역 특화산업 육성	1,011	872	2,300	2,576	2,670	2,846	2,561
1. 지역 특화산업 육성(R&D)	1,011	872	1,303	1,674	1,741	1,828	1,726 (82)
· 특화산업기술개발	1,011	872	564	857	978	1,110	1,185
· 전통산업육성	-	-	739	757	673	598	385
· 공공기관연계	-	-	-	60	90	120	74
2. 지역 특화산업 육성(비R&D)	-	-	997	902	930	1,018 (45)	835
IV.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	-	-	-	1,691	1,911	1,875
1.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	-	-	-	1,234	1,434	1,456 (64)
2.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R&D)	-	-	-	-	457	477 (20)	419
V. 지역산업육성 지원	88	67	62	50	55	67	61
총 계	7,637	6,702	5,962	5,622	4,417	4,824 (65)	4,497 (146)

〈표3〉 지역 대표산업 현황

지역	지역특화산업						협력산업(39개)			
	주력산업(63개)			폴뿌리산업(39개)						
				'14년 (20개)	'15년 (19개)					
대전	무선통신 융합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화	지식재산 서비스	금속 가공	안경렌즈	타월 패브리, 한방천안물	가능성 화학소재	광·전자 융합	지능형 기계
충북	반도체	바이오 의약	전기전자 부품	태양광	동력기반 기계부품	슈퍼푸드, 밤	초정 광천수	화장품 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충남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동물 식의약	디지털 콘텐츠	디스 플레이	자카드 직물, 백삼	관광 공예상품	이차전지	기계부품	가능성 화학소재
세종)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구절초 건강식품	기계부품		
광주	스마트 기전	생체의료 소재부품	복합 금형	디자인	초정밀 생산기공 시스템	웰니스 CoBe	건강용품, 생활용품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 저장용 소재부품	광·전자 융합
전북	기계부품	건강 기능식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 소재	주얼리, 오미자/천마/ 홍삼	Eco-Tex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 저장용 소재부품	바이오 활성소재
전남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 소재	바이오 식품	에너지 설비		타월, 산수유, 다시마	체결 공구류	바이오 활성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융합 소재
부산	지능형 기계부품	초정밀 융합부품	금형 열처리	바이오 헬스	디지털 콘텐츠	해양 바이오헬스	건강 기기	조선해양 플랜트	차량부품	가능성 하이테크 섬유
울산	친환경 기술린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조선 기자재	에너지 부품	환경	3D 프린팅용 소재	산업 부산물	자동차 융합부품	나노 융합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경남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 소재부품	항공	풍력 부품	항노화 바이오	실크소재 전통의상, 전통 목공예/가구	전통 다류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 융합소재	차량부품
대구	정밀성형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소재기반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소프트 지식 서비스	패션의류, 안경테/선글 라스	창호부품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가능성 하이테크 섬유
경북	모바일 융합	디지털 기기 부품	에너지 소재부품	성형기공	기능성 바이오 소재		금강송, 생물자원, 농약기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가능성 하이테크 섬유
강원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목공예품, 강릉커피	황기, DMZ 힐링우드	바이오 활성소재	의료기기	휴양형 미케어
제주	물응용	관광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 전기차 서비스		제주 무	전통 생활용품	휴양형 미케어	화장품 뷰티	

〈표4〉 주요 지역혁신기관 현황

구분	주요내용
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지역기술개발 시설의 집적하기 위해 '97년부터 2단계로 나눠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8개가 운영 중 ○ (주요기능) 지역정책·사업 기획과 창업·보육부터 시험, 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운영방법) 정부에서는 TP별 평균 9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지자체의 기반구축사업 및 R&D과제를 수행하여 재정 확충
지역 특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4+9 지역전략사업('99~'08) 추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설립한 지역특화센터는 현재 80여개 운영중 * 독립기관으로 운영 39개, TP로 통합 21개, 연구기관의 지역분원으로 운영20개 ○ (주요기능) 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해 지원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시제품생산 등을 지원 ○ (운영방법)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사업종료('12) 후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며 공모과제 경쟁을 통해 재정 확충
지역 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대학에 특성화 분야의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센터는 127개가 지정·지원되었으며, 현재 65개 운영 * 지역의 주요 거점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중이며 정부지원사업 종료 후 자립에 실패한 센터는 지정을 취소하고 장비활용, 연구가 활발한 센터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 (주요기능) 지역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장비활용·교육 및 애로해결 지원 ○ (운영방법) 정부는 '17년 10개 센터에 대해서 45억원을 지원
지자체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지역연고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설립한 지자체 연구소는 19개 설립완료 * (예시) 경기 천연물신약연구소,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충남 금산인삼약초연구소 ○ (주요기능) 산업낙후지역에 R&D거점기관 설립으로 우수인재시군외 유출방지 및 지역소기업 지원 ○ (운영방법) 정부에서 5년간 연구소별 20여억원, 지자체는 연구소 설립 부지 제공으로 설립, '17년 현재 지원종료 - 자체적으로는 일부 임대수익, 장비수익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운영비의 대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충당
전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출연과 산업부 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소로 현재 14개 연구소가 운영중 *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해 설립 및 허가 ○ (주요기능)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과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 (운영방법) 정부에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15년, 43억)으로 경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공모과제 경쟁을 통해 재정을 확충

II

계획 및 추진체계

1

계획 체계

1 계획의 종류와 관계

-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지역산업진흥계획」등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

계획의 종류	주요내용	관리체계			근거
		기획	계획/집행	평가	
지역발전계획	정부와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발전 종합계획	지역위	부처.시도	지역위	균특법
지역산업발전계획	시·도별 중장기 대표산업발전로드맵	산업부	시·도	-	요령
지역산업진흥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지역산업지원사업, 거점사업)	산업부 (KIAT)	시·도 (TP)	산업부 (KIAT)	
과제별 계획		TP	주관기관	평가단 (KIAT위탁)	

구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내용	1.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 복원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 발전 제도적 기반 정비(복지 의료)	1. 지역산업 현황 2. 지역산업 성과분석 3. 지역산업 발전전략 4. 지역대표 산업 5. 성과제고 전략	1. 지역산업발전계획 연차실행계획 2. 지역사업 성과제시 3. 지역사업 종합기획 - 사업배치와 추진 방법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

- (개념)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가 수립하는 연차별 종합 실행계획(10년부터 시행)*
 - * 계획대상: 지역특화사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거점사업
- (구성·평가) 다음 연도 계획 부문(D+1년)과 이전 연도(D-2년) 성과 부분으로 구성되고, 성과는 상반기·계획은 하반기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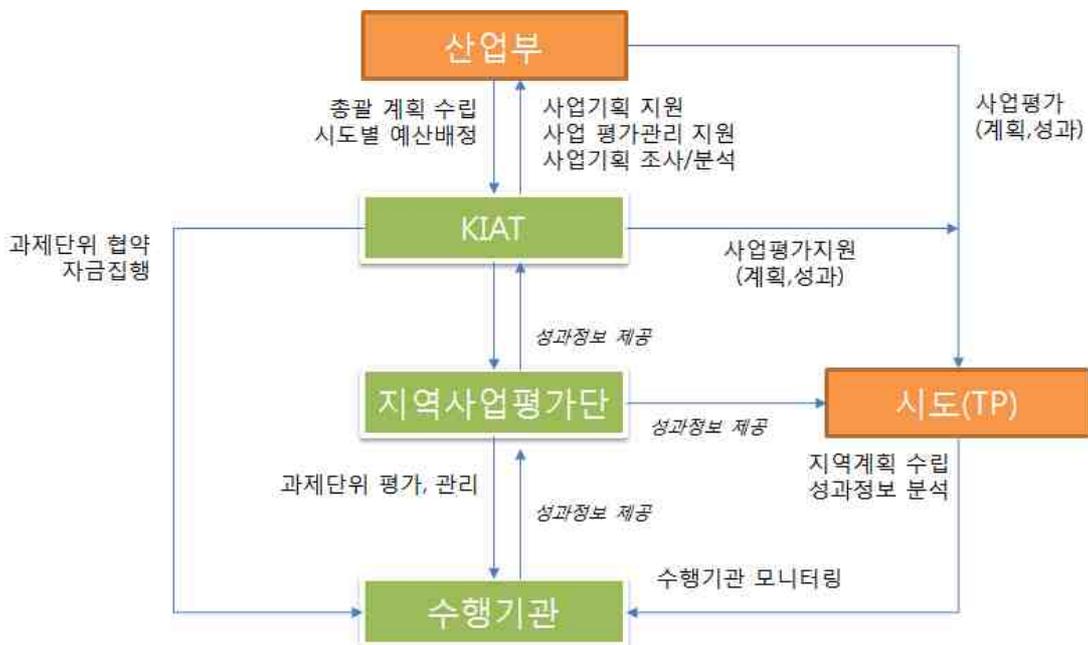
계획부문	성과부문
▶ 지역산업발전 정책방향 및 전략 ▶ 다음 연도 지역산업 발전전략 ▶ 다음 연도 대표산업별 육성전략 ▶ 다음 연도 기타 산업 및 사업 육성전략	▶ 진흥계획 이행실적 ▶ 지역산업 및 기업 성장추이 ▶ 지역산업 지원사업 성과 및 관리 ▶ 대표적인 성공 사례 ▶ 성과홍보 및 사업개선 방안

2

추진체계

구분	기관	주요기능	
중앙	산업부가 총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		
	산업부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획 총괄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시·도별 계획 평가 및 예산 배정 	
	KIAT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획 지원 ▶ 시·도별 계획 평가 지원, 사업별 사업별 평가관리(협약 변경, 성과관리 등) ▶ 과제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역	시·도가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계획에 따라 추진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지방비 매칭 	
	TP	기획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계획수립 지원 ▶ 과제의 기획 ▶ 과제의 성과 조사·분석 	과제수행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자원 조사·분석 ▶ 모니터링 기업군 관리 ▶ 비즈니스 중계 기능 지원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선정, 계속, 결과 평가·관리 ※ 산업부의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KIAT의 선정·평가 기능 일부 대행
	수행기관	▶ 과제를 수행(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기관)	

〈그림〉 지역산업지원사업 추진체계도



III

주요사업내용

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주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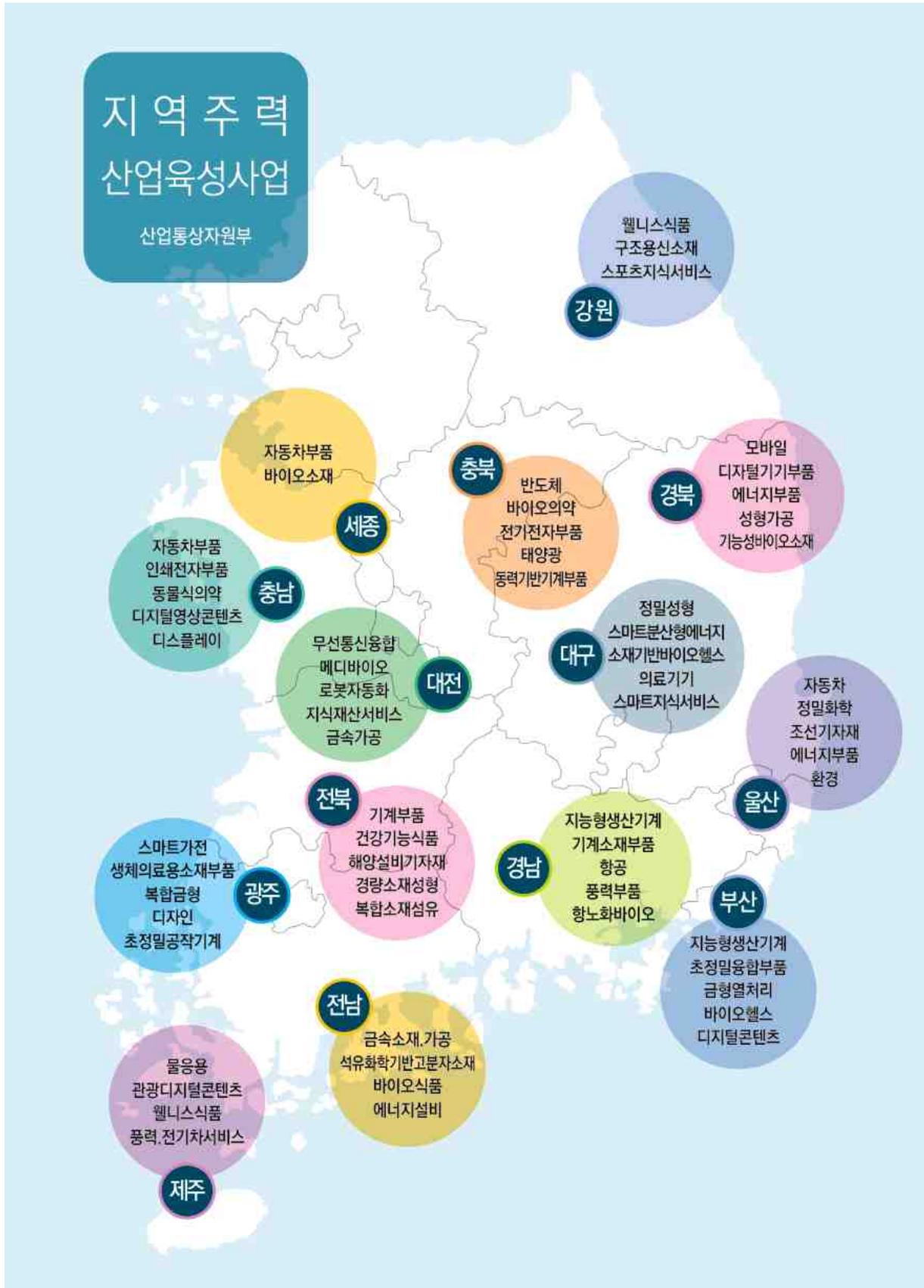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도별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기업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선정)** 시·도가 자기 지역의 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을 분석하여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추산업으로 선정(63개)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 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주요내용

- **(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조건부 지역별 주력산업분야(특화발전프로젝트 연계) 기술개발(R&D) 과제 지원(품목지정 4억원, 자유공모 3억원 이내)
* 조기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시현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원
- **(기업지원)** 지역혁신기관이 기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혜(중소·중견)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 **(지원현황)** '17년도 기술개발 435개 과제, 기업지원 212개 과제에 933억원과 484억원, 총 1,417억원 국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역기업의 현실에 맞는 ‘지역기업 수출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수출유망기업 선정 및 연계지원·네트워킹을 지원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수출새싹기업을 선정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형기업으로 육성

□ 주요내용

- **(수출지원 강화)** 기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군의 검증·조정 및 신규기업 발굴 등을 통해 수출새싹기업지원 확대('16년 27억 100개→'17년 37억, 150개)
 - * 기존 수출유망기업 및 OKTA회원(약 500개)의 육성고르기 추진
 - ** '16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요맞춤형 수출지원 메뉴 강화
- **(연계지원 강화)** 기존 지역 수출유망기업의 비R&D사업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R&D과제 우수 결과물까지 연계지원을 확대
 - * 수출 유망기업 비R&D 연계 지원(추천방식→RIPS 통합공고 신청안내)
 - ** 주력/창의융합 R&D 우수과제 대상 비R&D사업 연계지원
- **(민간역량 활용강화)**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친구맺기 매칭기업 간 교류협력 내실화, 해외거래선 발굴 기회 확대, 수출준비 지원 추진
 - * (교류협력) 수출친구맺기 매칭기업 간 교류행사(국내 4월, 10월 등) 추진
 - **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유망기업 및 지역연고사업 관련기업 대상 수출상담회(중동 2월, 동남아 8월, 중국 12월, 국내 4월, 10월)개최
 - *** (수출준비 지원) OKTA의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전문교육,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강화 등

□ 주요성과

- 수출유망기업 615개를 발굴하여, 수출친구맺기(OKTA회원-유망기업) 295개사, 지역사업 연계지원(수출 후속지원 수요 맞춤) 180개사 등의 실적 달성
 - * 상품개선, 인증 등 후속지원을 통해 총 86건(12백만USD) 수출계약 체결
- 수출유망기업 中 수출새싹기업 142개사(주력사업)를 선정,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역량 활용한 수출지원 추진
 - * 계약액 14백만 달러, 수출액 8백만 달러, 계약건수 152건, 수출액 발생기업 80개사

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연고사업)

□ 사업목적

- 시·군·구 연고자원 활용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지역대학 인프라구축, 공동연구, 애로기술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풀뿌리기업육성)** 시·군·구 단위(지역생활권)의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해 IT·BT·N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역연고(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산·학·연 사업단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기업 연구개발, 장비활용·교육, 애로기술해결 등 지원

□ 지원현황

- '17년도 총 385억원 규모로 86개 과제에 700여개 수혜기업 지원

구 분		지원과제 수	지원예산	수혜기업 수
풀뿌리기업육성	신규	22	8,393	88
	계속	42	19,324	257
지역연고산업육성	계속	12	6,286	270
지역혁신센터조성	계속	10	4,540	85
합 계		86	38,543	700

- **(마케팅플랫폼)** 오프라인(현대백화점, CJ올리브영)과 온라인(우체국쇼핑몰, 공영홈쇼핑) 등 민간 유통채널을 통한 마케팅플랫폼 구축

* 현대백화점(전체 18개 매장) 內 15개 매장에 49개 기업(제품) 입점('17.8월 기준)

** CJ올리브영(전체 840개 매장) 內 70개 매장에 6개 기업(제품) 입점('17.8월 기준)

*** 우체국 쇼핑몰 內 62개 업체(436개 제품) 입점 및 공영홈쇼핑 1개 기업(제품) 방영

□ 사업목적

-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

□ 주요내용

- 이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분야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을 10억원 이내에서 패키지로 지원
 - * '17년 74억원, '16년 114억원, '15년도 90억원, '14년도 60억원 지원
- 사업기획 중심의 네트워킹 과제를 과제간 연계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융합얼라이언스로 개편
 - 지역협력사업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연계 촉진, 기업의 애로·협력사항 발굴 및 지원 등 공공기관과 지역간 네트워킹 강화

□ 지원현황

- '16년 12개 지역의 26개 공공기관과 89개 혁신기관 및 기업 지원
 - * 계속과제(29개, 83.82억원), 신규과제(23개, 30.58억원(네트워킹 포함))

번호	지역	전체 기관	공공 기관	'16년도 국비 (백만원)	번호	지역	전체 기관	공공 기관	'16년도 국비 (백만원)
1	부산	11	4	799	8	충남	6	2	646
2,3	대구경북	23	6	1,979	9	전북	11	2	889
4	광주	12	3	1,225	10	전남	6	1	975
5	울산	8	1	913	11	경남	17	4	2,016
6	강원	9	3	985	12	제주	1	-	20
7	충북	11	1	993	합 계		115	26	11,440

* 대구와 경북지역은 통합하여 사업추진

참고 3 주요 성과 사례

-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 성장 촉진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내 중소기업과 구매조건부 스마트 LED 도로조명 개발 추진 중 제품 공신력 인정받아 해외수출 판로 개척
 - * 필리핀 도로국에 37.5억원 수출, 베트남, 키르기스탄 등 시장 진출 확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내 기업((주)임베디스솔루션)과 구매조건부 로 공동 기술개발 추진하여 가스검지기 국산화 기술 지원
 - * 가스검지기 국산화를 통해 연간 31.5억원 수입대체 효과

- **(인력양성)** 공공기관-대학간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 **(한국전력기술)** 경북보건대와 발전플랜트분야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사업(교육과정·교재 개발,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 등) 추진하여 채용 연계
 - * 컴퓨터 설계 교육 수료생 25명이 협력사 취업(교육훈련비용 18.7억원 절감)
 -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세대 공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 연계(MOU 체결)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5명), 서울지방경찰청(1명) 채용

- **(기업지원)** 시제품제작, 마케팅, 장비, 인증 등 지역기업의 사업화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 무료 컨설팅 지원으로 2.67억원 수수료 절감, 컨설팅 수혜기업에서 신규인력 20명 채용
 - **(세라믹기술원, 중진공, 국방기술품질원)** TP와 공동으로 경남지역내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장비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
 - * 경영·기술지원(23건), 시제품제작지원(10건), 특허지원(11건) 등을 통해 19.23억원 매출 발생

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거점기능지원)

□ 개요

- TP의 기능고도화를 위해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 관련 핵심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TP효율화를 위해 제도정비 및 경영실적평가 추진
- 지역산업종합정보 집적화 및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 * 지역 내 장비·일자리, 지원정보 등의 정보 집적화 및 유통(제공, 중개)기능 강화

□ 주요내용

- TP 기능에 대한 성과중심 사업평가를 강화하고, 주요업무의 질적수준 제고 및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기능고도화·핵심역량 강화 추진
 - * TP별 세부 업무수준 및 기업지원수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포털) 구축(6월)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정보를 집적화하여 제공
 - * 주민 : 일자리, 교육 등 / 기업 : 기업지원, 산업기술장비, 박람회 정보 등 / 혁신지원기관 : 기업현황 등

지역종합정보시스템			
	↑↓	↑↓	↑↓
구분	지역종합정보시스템 (신규구축)	기업이력관리시스템 (신규구축)	RITIS (기구축, 시스템 고도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장비현황 ○ 지역기업, 구인·구직정보 ○ 인력양성 교육정보 ○ 지역박람회 정보 ○ 지역지원사업 정보 ○ 지역기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산업 성장추이 * 기업 일반현황 ○ 과제지원성과 비교분석 * 연도별 지원 및 성과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정보 *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 성과정보 * 매출, 고용, 특허 등
관리 주체	KIAT	KIAT	KIAT (지역사업평가단)
공개 범위	대국민	해당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참고4

산업기술단지 및 사업시행자(TP) 설명자료

- '98년 테크노파크(TP) 조성이 추진된 이후, 지난 15년 간 18개 TP가 설립되었고, 태동·확대 및 착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짐

< TP조성운영정책 추이 >

지원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태동기	확대기	착근기
중점목표	H/W(인프라) 구축		S/W(사업) 지원
지원 사업	제1차(98~03) TP조성운영사업	제2차(04~07) TP조성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08~12)

* 1단계('98~'08) H/W중심 2,580억원, 2단계('08~'12년) S/W중심 717억원 지원

- TP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성장하였고, 지역별로 설립된 특화 센터를 통합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변천*을 거듭

<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

구 분	선발TP(6)	후발TP(8)			민간주도TP(4)			
대상지역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대진	서울	대전	제주
지정시기	'97.12	'00.12	'03.12	'04.12	'05.3	'05.9	'08.1	'10.1

※ 13개 TP(본부 및 특화센터)가 산단 내 위치(국가산단 4, 일반산단 8, 도시첨단 1)

- **(기술단지의 모습)** 초기에는 기업보육, 기술지원 등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정책·사업 기획, 기업지원서비스 등으로 점차 기능을 확대

* 초기에는 기술창업보육(TBI), 공동기술개발, 시험생산, 정보제공 등에 초점

- **(운영현황)** 지리적으로 위치가 이격된 곳을 고려하면 총 34개 지역이며, TP의 본부 또는 센터가 지역별로 위치하여 관리·지원 중
- **(입주기업)** 산업기술단지 당 입주기업은 평균 112개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4년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34억원 규모
- **(고용현황)** 산업기술단지 내 고용도 18,401명 수준으로 입주기업이 늘면서 증가 추세를 보임

< 입주기업 고용/매출 추이(18개 TP 합계)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입주기업 고용(명)	14,900	14,158	14,711	15,385	16,652	18,632	18,401
입주기업 매출(억원)	-	49,426	57,064	60,012	63,971	78,348	67,958
입주기업 수(개)	1,195	1,280	1,422	1,506	1,695	1,789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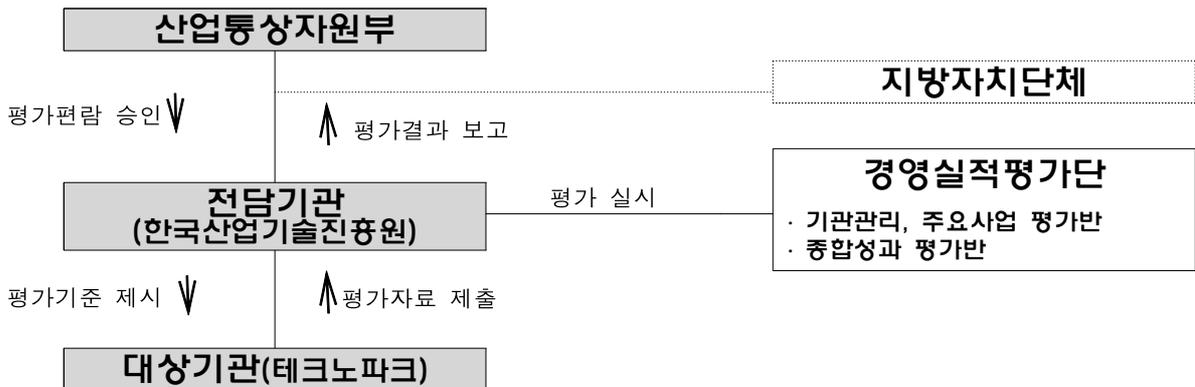
참고5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TP) 경영실적평가 설명자료

- **(추진경과)** '09년부터 매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TP)의 경영실적 평가
- **(평가목적)**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기업 등의 이해관계자 만족을 유도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 인프라 조성·운영사업 등 既 투입 정부출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활용을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평가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 (경영실적 평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제7조 (기관평가)
- **(평가대상)** 전국 18개 (재)테크노파크

구 분	선발TP(6)	후발TP(8)		민간주도TP(4)		
기관명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대진	서울, 대전, 제주

추진체계



<부문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기관관리	· 기관의 비전목표, 리더십 등 · 조직자원이 효율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여부
주요사업	· 주요 사업성과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종합성과	· 고객만족도,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지역내 기여도 등

2016년 추진현황

경영실적평가 준비	서면평가, 상호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종합평가 및 결과통보
· 양식배포 · 설명회 개최 3월 ~ 4월	· 평가위원별 서면평가 · TP간 상호평가 5월 ~ 6월	· 증빙자료 확인 · 기관장 인터뷰 6월 ~ 7월	· 종합성과평가위 개최 · 평가등급 결정 및 통보 10월 ~ 11월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도 자율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선정)** 14개 시·도 간 자율협의를 통해 총 17개 프로젝트 도출
 - 시·도 단위 지역사업(예:전략사업, 주력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연계성이 높은 산업 선정

< 17개 경제협력권산업 현황(시도별 39개 협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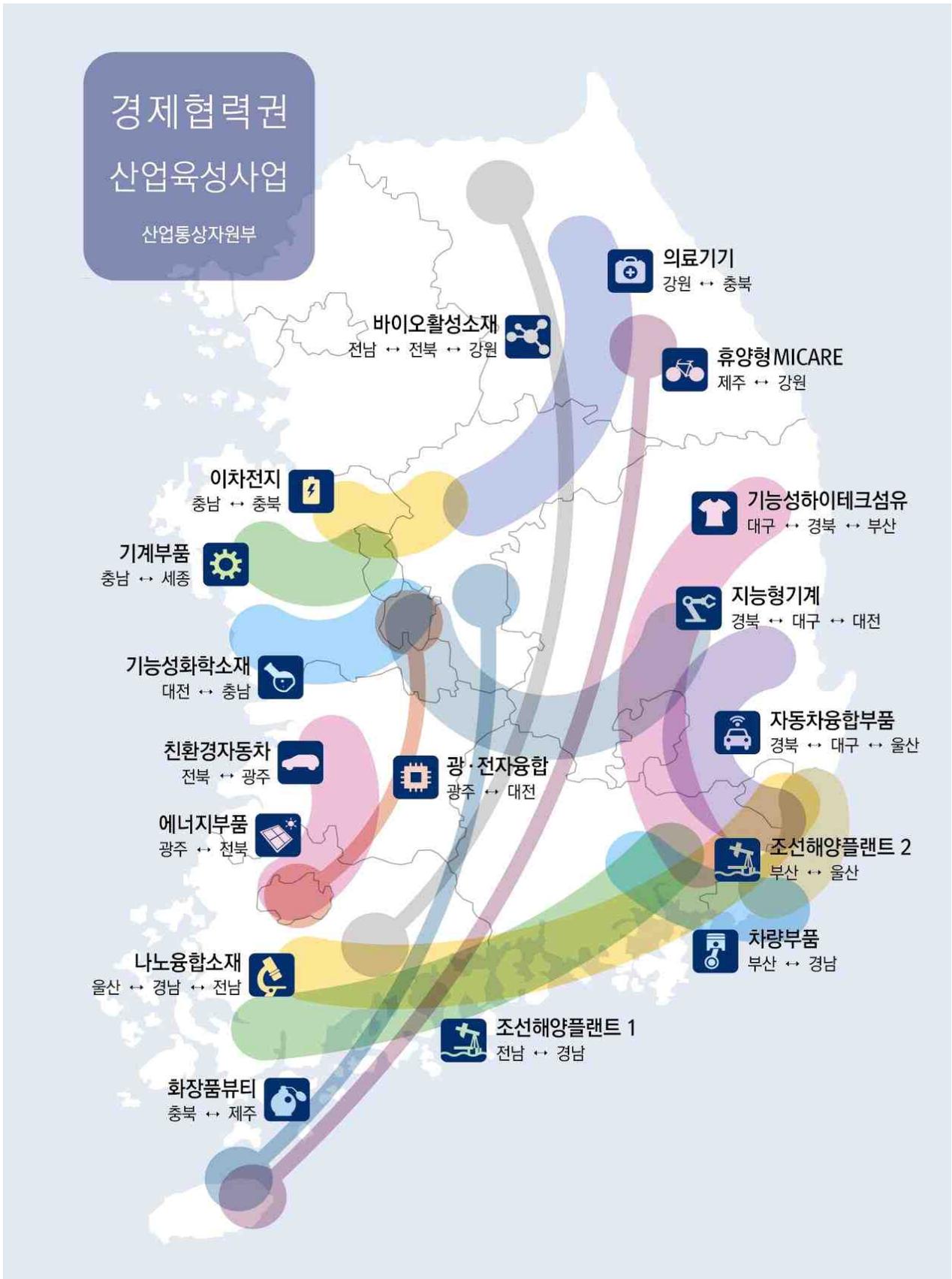
경제협력권산업	경제협력권		경제협력권산업	경제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I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 II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 주요내용

- **(지원개요)**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과제 지원
 - 기술개발 : 17개 프로젝트별로 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
 - 기업지원 : 시도별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화, 기술, 역량강화) 제공
- **(지원현황)** '17년 기술개발 189개 과제, 기업지원 43개 과제에 1,579억원 지원

참고6

경제협력권산업별 협력시도 현황



II

성과와 문제점

1

주요성과

□ (지역 균형발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성장세가 강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성장률 격차도 일부 완화*

○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성장 주도(생산, 고용, 사업체 수: ■ 비수도권 ◆ 수도권)



* GRDP 성장률(수도권:비수도권) : ('85~'04년) 7.8:6.9 → ('05~'13) 3.7:3.7

□ (지역 혁신역량) 지역의 자발적 발전체계 구축과 혁신역량 제고

○ TP, 지역특화센터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지역에 광범위하게 구축

* TP 18개, 지역특화센터 61개, 지자체연구소(RRI) 19개, 지역혁신센터(RIC) 127개 등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지역산업진흥체계가 자리매김

□ (대표산업 성장) 지역대표산업이 비대표산업(제조업) 대비 높은 성장 달성

○ (지역전략산업, '02~'12) 동일기간 내('02~'11) 전략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등이 비전략산업(제조업) 보다 높은 증가

<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의 주요지표 증가율 비교('02~'11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전략산업	1.36배	1.45배	3.77배	3.36배
비전략산업	1.11배	1.08배	2.19배	1.82배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특화도 상승 (39개 전략산업 중 입지계수 1.5 이상 산업 '02년 16개 → '11년 24개)

○ (지역특화산업, '12~) 지역 특화산업의 주요지표 연평균 증가율이 기간 내('12~'14) 비특화산업, 전국 제조업 보다 상회

< 지역 특화산업과 주요지표 연평균증가율(CAGR) 비교('12~'14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지역 특화산업	5.0%	5.4%	3.3%	5.8%
전국규모 특화산업	4.8%	5.2%	2.7%	4.8%
전국 제조업	3.7%	4.1%	2.1%	4.2%
지역 비특화산업	4.6%	4.7%	2.6%	4.8%

- (광역선도산업, '09~'14) 총 1.38조원을 투입하여, 관련 매출 10조원, 수출 109억불, 2.7만명의 고용성과 창출

< 광역선도산업육성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

구 분	목표	성과	달성도
매출액(억원)	81,298	97,074	119.4
수출액(억불)	31	109.2	352.3
신규고용(명)	21,930	27,303	124.5

2 문제점

- (환경변화 취약) 세계경제 성장 둔화,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주력산업과 함께 발전해온 지역경제의 어려움 가중
- 대내·외 경제 환경의 침체, 특정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라 비수도권 생산, 수출 등 주요 산업지표가 동반 하락하는 추세



- 특히, 전남, 울산, 경남 등의 조선,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장치형 주력산업 집적지역들의 산업생산 침체 가속화
 - * '15년 수출 증감율 : 전남 -22.0, 울산 -21.1, 경북 -15.6, 경남 -8.1
- (제조업 편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 타겟팅* 고착, 단일 목표와 일률적 지원방식으로 지역산업의 자율적 성장에 한계
 - * 43개 전략산업 중 제조분야 41개(95%), 63개 특화(주력)산업 중 55개(87%)
 - ** 전통 제조기반이 강한 지역(경남, 경북, 울산, 부산)은 정책효과 미비(국회 예정처, 2016)

- 지역산업 성장 효과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나, 현 지역 산업 정책은 단일 목표*와 시책**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

* 모든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목표는 신규 고용 창출로 단일화

** 육성대상 산업 관련 제품의 상용화 R&D 지원, 사업화·기술지원 등 비R&D 지원

-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중이나, 좋은 일자리인 서비스업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제조업 일자리 위주 증가

* '00~'14년간 제조업 종사자수 증가율(%) : (수도권) 0.8, (동남권) 21.7

'00~'14년간 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가율(%) : (수도권) 59.8, (동남권) 12.5

- 수도권으로의 산업기술인력 집중도 확대 추세 (■ 비수도권 ◆ 수도권)



- (역량분산) 한정된 자원 하에서 다수의 주력·협력산업 육성에 따라 역량 분산·투자효과 저하 및 신산업 발굴·육성에 한계

- 시·도별 대표산업 개수*는 확대되었으나, 산업당 지원금액**은 축소되어 산업육성에 미치는 파급효과 저하

* 시도별 대표산업수 : (참여정부) 4개, (MB정부) 5.5~7개, (박근혜정부) 7~8개

** 산업당 연간투자액(억)/기간

(4개지역1단계) 351/5 → (전략) 73/5 → (광역1) 153/3 → (주력) 32/3, (협력) 99/3

- 지역R&D 과제경쟁률이 산업기술R&D 보다 낮고*, 산업별·유형별 경쟁률 편차도 크게(0.5~8.0) 발생

* 최근 3년간 과제 경쟁률 : (주력사업(지특)) 2.4:1 (산업핵심(일반)) 3.2:1

- 과제당 2~6억원 내외 소규모·분산 투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균등배분으로 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 한계

신산업육성, 융·복합, 스마트화, 서비스화 등을 키워드로, 지역산업 육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

- ① 연구·투자 중심의 신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②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광역 클러스터화
- ③ 주력산업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산업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신성장 거점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

-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지역성장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거점 구역으로 육성
 - 실증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신기술 규제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투자 촉진을 접목하여 기술혁신 등 사업 성과의 효과를 제고
 - ※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의 제품화를 위한 기초·실증 연구 등과도 연계
 - Open LAB을 구축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간 공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교류, 창업연구 촉진
 -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되던 연구기반을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특구 등 지역의 성장거점에 집중하고 산업육성의 통합 지원 강화
 - 공동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통합적 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 ※ 지역별 미흡분야 과제도출, 기반구축과 지역사업(R&D·비R&D) 연계 확대
 - 지역 여건에 따른 사회적경제 중점육성분야를 시·도 자율로 선정하고, 지역민 주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장(Scale-up) 지원
 - 분야별 가치사슬에 연결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클러스터링 촉진하고,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질적 성장과 확산 유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역 생태계 촉진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궤를 같이 하고, 지역간 자율 합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같이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대표 신산업으로 육성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치사슬을 주도할 기업의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R&D 및 비R&D 연계 지원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실증프로젝트 및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신산업 중심의 기획·개발·실증·제품화 등 생태계 구조를 창출
-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 기획에 기반하여 산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투자 유도
 - 주력산업의 생산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업종의 다각화를 위한 ICT, 제조업-서비스업간 융·복합 촉진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ICT 연계 및 공정개선 등 스마트화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활용 장비·시설의 체계적 확충
 - 주력산업 분야 지역스타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산-학-연이 협업하는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구분	현행	⇒	개선
시·도	산업간 획일적 지원		주력 성장단계별 지원 이업종간 융·복합 지원 성장주도형 대표 기업 육성
시·군·구	제조업 중심, 풀뿌리 기업 마케팅 지원		연고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지역間	지역간 비즈니스 협력		CB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R&D+제도(조세, 기술규제 특례)
거점·기반	지역 분산형 기반구축		경제 협력권 국가 신산업 육성과 연계 지역간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구지정, 기술규제 특례 신산업 실증프로젝트
			공공기관 Open LAB중심의 공공기관 산학연 생태계
			거점사업 신성장 거점 중심의 기반 구축 연구기반 중심의 지역사업 연계 강화

V

주요사업의 개편내용

1

국가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육성

◇ 참여정부 시절 다극화 성장거점의 주역인 혁신도시를 계승·발전시켜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혁신도시 시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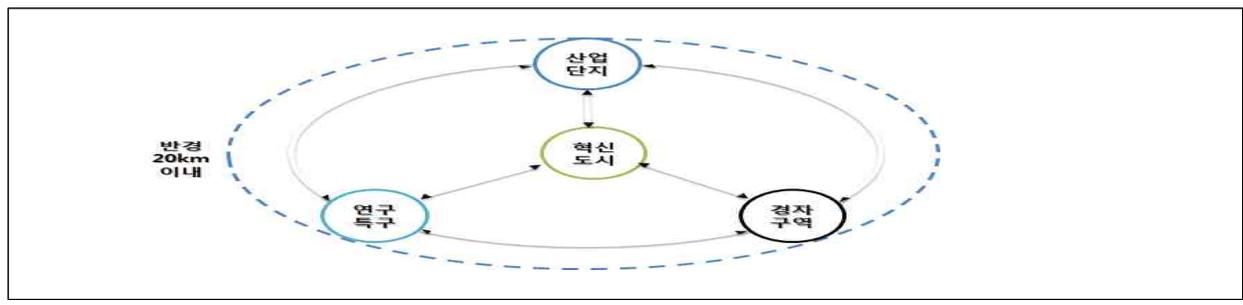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간 연계강화, 클러스터 앵커기업 유치 등 지원

1. 국가혁신클러스터 개념 및 추진방향

【 핵심 개념 】

◇ 수도권 중심의 일극 성장 극복을 위한 다극화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단 등을 엮어 대단위 산업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1단계 H/W 인프라 조성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

① (신규 개발 지양)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막기 위해 거점 신규 조성을 지양하고, 인프라를 既 완비한 거점을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 기존 거점 >

· 신규거점 개발 중심의 정책

⇒

< 국가혁신클러스터 >

·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거점을 활용 · 연계하여 효율성 극대화

② (거점간 클러스터화) 단일 구역 지정중심의 틀을 벗어나 두 개 이상의 거점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 기존 거점 >

· 주로 단일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

< 국가혁신클러스터 >

· 상호 떨어져 있는 다수 거점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연계

③ (평가-피드백 강화) 시도별로 후보 클러스터를 선정 후 지역주도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우수 거점에 집중 지원

* ① 특정 지역 위주로만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지역 갈등 등으로 정책 실패 우려 大, ② 지역주도 운영 → 사후 피드백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기존 거점 >

· 先 거점 지정 → 後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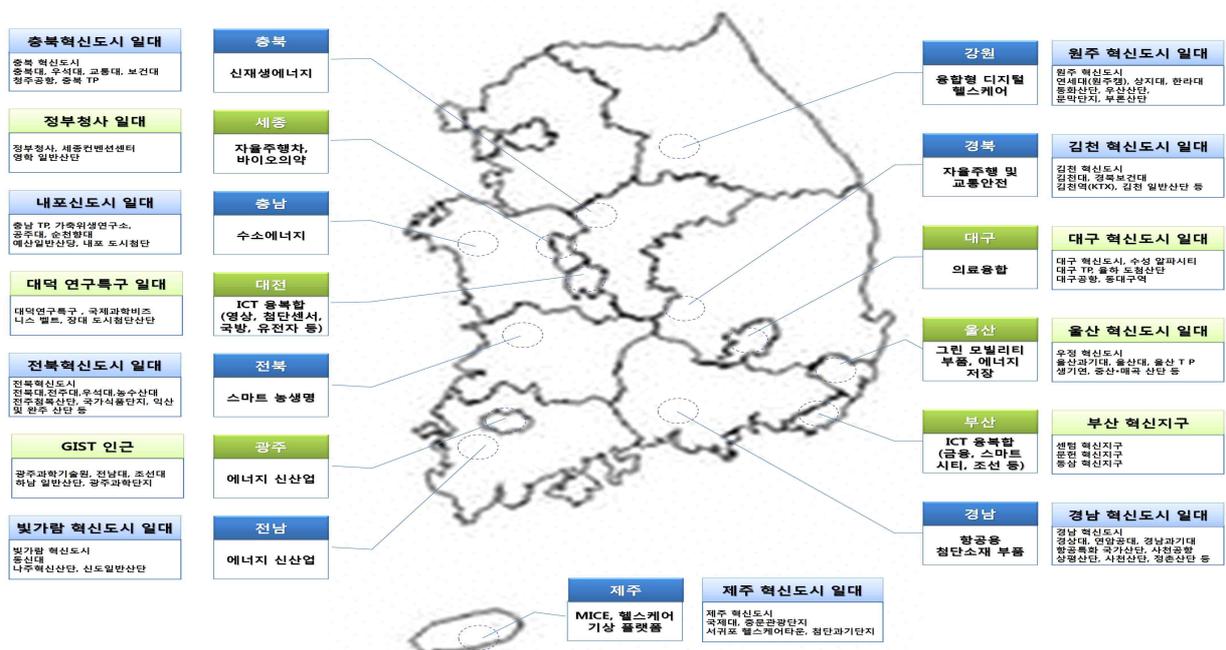
< 국가혁신클러스터 >

· 先 거점 운영 → 後 평가·피드백

□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방향

- ① 시·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군을 육성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
 - ② 정부는 시·도의 거점 연계 계획을 제도화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 신설 ⇨ 파격적 지원을 통해 다극화 성장거점으로 육성
- ☞ 동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바탕으로 시·도와 협의하여 '18년 상반기 중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상세계획 수립 예정

【 지역별 성장 거점군 육성안(예시) 】



- (선정 절차) 각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시도별 클러스터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

* 지역위 간사부처인 산업부가 국가혁신클러스터 관련 사무를 지원

- (평가 및 피드백)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글로벌 클러스터(유형 ①)와 자율형 클러스터(유형 ②)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선정된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3년 단위 평가를 통해 재분류(글로벌 vs 자율형) → 중·장기(10년)적으로 4개 내외의 클러스터 최종 선별

【 연도별 클러스터 선정 방향 】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① (투자 펀드) 혁신클러스터 등에 민간자본 등 시장 중심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펀드(가칭)」 조성

- 대한민국 균형발전 펀드를 모펀드로 하여 권역별 대규모 투자 유치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하위 펀드 조성·투자

- ② (투자 특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지방 본사 이전 촉진을 위해 규제 적용기준에 특례 조항 마련을 검토

- ③ (투자 보조금) 혁신클러스터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우대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투자에 지원 강화

* 입지매입비용,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6~40%를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지원

- 혁신클러스터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 일반지역보다 설비·입지투자에 대한 지원비율 3~8%p 우대적용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투자의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하여 기존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보조율을 고용 중심으로 재편

* (예) 300억 투자시 보조금 : (現) 고용무관 42억 ⇨ (改) 고용비례(50~150명) 30~54억

- ④ (지역개발) 시·도지사가 희망할 경우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산단·특구 등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구로서 순창군 발효 문화사업지구 등 총 9개소 선정('16년말)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권역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 73종, 인프라 지원, 인·허가 지원 등 제공

【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유형별 지원	공통 지원
발전촉진형 (낙후지역)	도로개선 등 인프라 지원, 조세감면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인·허가 지원, 민원지원 등
거점육성형 (일반형)	-	

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대규모 실증단지로 활용

- ① (규제 특례)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산업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신기술기반사업 제도) 등 스마트 규제혁신 지원

- 새로운 산업의 실증 공간 및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공간으로 활용

- 그레이존 해소 :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허가 등의 관련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시·도 및 정부에 해석 요청 ⇨ 정부는 규제확인에 관한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산업의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아 혁신클러스터 내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신사업 추진

- ② (메가 프로젝트) 클러스터내 혁신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

○ 시·도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메가프로젝트를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R&D, 비R&D 과제 지원

- R&D :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프로젝트
- 비R&D : 지식서비스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 인력양성,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 등 지원 등

【 참고 : 혁신클러스터 대단위 실증프로젝트 컨셉(예시) 】

지역	분야	주요 방향
대전	메디바이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된 바이오 관련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관 유수의 혁신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메디바이오산업 육성
충북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기반)	태양광산업 관련 기반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마이크로그리드 개발 및 확산
충남	동물바이오	내포신도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료·동물약품 제품 및 질병 예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광주	스마트 광전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집적된 광전자산업 혁신기관 등 역량을 바탕으로 센서 등 스마트 광전자산업 육성
전북	농생명	혁신도시와 친환경첨단복합지역을 포함한 혁신·융합 벨트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생명 거점 클러스터 육성
전남	신재생에너지 (풍력 기반)	혁신도시에 이전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및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연계하여, 풍력 등 에너지 산업 도고화
대구	전장 의료기기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로봇, 레이저 응용 관련 대학 및 병원과의 연계하여 의료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경북	스마트 모빌리티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과 김천 인근에 집적화된 자동차 부품 기업을 연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
부산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과 센텀지구의 집적화된 인프라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울산	지능형 방재산업	혁신도시에 이전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능형 방재산업 육성
경남	항공우주 소재부품	진주/사천 지역의 항공기 및 세라믹 산업의 역량을 연계하여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부품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을 기반으로, 개인건강기록 빅데이터 분석과 ICT 기술을 접목하여, 맞춤형 헬스케어산업을 육성
제주	스마트 MICE	제주혁신도시와 지역인프라를 연계한 스마트 MICE 산업클러스터 육성
세종	스마트 시티	세종시에 건설된 첨단도시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구축

다.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연계 강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

① 혁신도시에 OpenLap을 중심으로 지역기업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산·학·연 구심체 마련

- 사무국, 시제품·디자인 팩토리(교류촉진의 장), 대학원 연구실, 창업·생산 공간(메이커 스페이스)등으로 OpenLap 구성
- 기업·대학·연구소·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활동의 구심체를 마련하고 활동거점으로 혁신생태계의 플랫폼 기능 수행



②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마련

- (연차보고) 시·도별 사업성과분석 및 지역협력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실시하는 지역발전연차보고서에 수록하여 국회보고
 - * 균특법 개정('16.12.2), 연내 시행령 개정(제20조)으로 법적근거 마련 완료
- (경영평가) 이전공공기관별 지역협력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기재부협의)
- (상생평가)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상생법)에 '지역협력실적'을 반영

③ 산·학·연 R&D지원을 확대(매년 80억 규모→500억원 규모)하여,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혁신동력 부여

- (단기상용화R&D) 혁신도시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기능 감안하여 공공기관, 기업, 대학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R&D과제를 지원
- (중장기선도R&D) 지역기업이 수행 가능한 공공기관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프로젝트 계획수립 지원
 - * 기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마케팅, B2B 협력지원하며, Open LAB을 중심 정보, 기술교류 네트워크 추진

〈참고. 공공기관 연계 사업개편 전후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명	▸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산·학·연 혁신사업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 향상, 기업지원 역량 강화	▸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단순 R&D 지원 중심(패키지) - 기술개발(R&D) - 기업지원 - 네트워크 등	▸ 혁신도시 산·학·연 혁신생태계 플랫폼으로써 전주기적 기업지원 - 단기상용화 R&D - 중장기선도형 R&D(신설)
지원방법	▸ 전국 대상 자유공고·선정 - 산업부 공고 → KIAT 선정 평가	▸ 시도계획 수립 후 공고, 지역별 선정 - 시도별 종합계획 → 산업부 공고→ 지역별 선정 평가 및 차등화
제도적 유인책 (피드백)	▸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 없음 ▸ 지역발전유공자(임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지역발전연차보고서 수록(VIP보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신산업 제품화 중심의 경제협력권사업 재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 전반에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14개 프로젝트)

주요 추진방안

- ▶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자생적 산업육성 기반이 갖춰진 12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개편
 - * ①전기·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⑧에너지신산업 ⑨첨단 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 ⑫차세대 반도체
- ▶ 프로젝트 주관 시도를 중심으로 사전지정 없이 산업 생태계에 따라 타 시도와 자율적 협력 허용
- ▶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프로젝트당 국비 연 60억 규모(R&D 38억, 비R&D 22억) 투자
 - * 시·도별 지방비 R&D 10억, 비R&D 5억 등 총 15억원 매칭 투자
- ▶ 프로젝트 단위로 R&D·비R&D 영역을 통합·기획하여 R&D과제의 사업화지원을 비R&D 과제가 총괄 지원

1단계 협력산업	주관시도	참여시도	2단계 산업/프로젝트(안)	주관시도	참여시도(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부산	(전기·자율차) 전기차 융합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대구	경남
광전자융합에너지부품	광주	대전 전북	(에너지 신산업) DC 기반 MG(Micro-Grid)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조선해양플랜트2차량부품	부산	울산 경남	(스마트·친환경선박) ICT기반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육성	부산	전남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전기·자율차) 상용 및 SUV 기반 고안전·친환경 차량부품산업 육성사업	전북	광주,부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전남	(전기·자율차) 지능형 ICT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육성사업	울산	경북,세종
이차전지기계부품	충남	충북 세종	(바이오헬스) IoT 융합형 실버케어 기기	충남	세종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워터 그리드 융복합 플랫폼 개발	대전	강원
의료기기	강원	충북	(바이오헬스) 웹-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강원	대전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프리미엄 신소재) 뷰티·향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제주	충북,충남,전북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강원	(첨단신소재) 고기능·친환경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전남	경남
지능형기계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대전 대구,울산	(첨단 신소재) 차량용 융복합 경량소재부품	경북	대구,울산
-	세종		(첨단 신소재) 미래시장 선점형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스마트·친환경선박) LNG 병커링 선박 기자재 산업육성	경남	울산

◇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서비스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확산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요성) 新정부 '국정과제(26.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사회적경제 혁신거점육성을 위한 사업
 - * 「공약사항 60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당됨
- (추진 필요성)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관점의 R&D지원 필요
 - CB는 전국에 약 14천여개가 설립되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다수 CB가 인건비 지원 등에 의한 생존이 주요과제
 - 전문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성장과 확산은 부족
 - 산업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기술·사업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응용 R&D 및 R&BD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 극대화 가능
 - CB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혁신자원(장비·전문가 등)을 활용
-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상품·서비스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확산 지원
 - 상품·서비스에 대한 진단, 기술혁신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기술*을 도출하고, 혁신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이전
 - * 적정기술(Low Tech → Middle Tech), Scale-up, ICT융합 기술 등
 - CB의 기술혁신 수요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사한 유형에 대한 모듈단위 공통기술개발
 - CB별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자원결합 과정에서 필요한 이(異)업종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개발
 - * 가죽생산CB+수제화 생산CB+디자인CB의 연결을 통한 각CB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수요조사 결과 (’17.5월~6월, CB조직 100개 대상)】

- R&D 필요성은 83%, R&D의향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한 SE도 56%에 달함
- 응답자의 80%가 기존 개발기술의 융합 또는 맞춤형 적용 등 중급수준의 R&D수요 응답

- ◆ 주력산업 구조조정, 융복합 산업 확대 등 지역주력산업 개편
- ◆ 지역이 주도하여 주력산업 육성 하도록 자율성 확대
- ◆ 산-학-연 협업 기반으로 지역스타기업 중심 주력산업 육성

1. [산업개편] 주력산업 구조조정 통한 정부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제조+ICT/서비스 등 융복합 확대로 고부가가치화, 다각화 추진

- 14개 시·도 주력산업 63개 → 48개(△15개)로 구조조정
- 제조+ICT(7개→23개), 제조+서비스(7개→11개) 등 융복합 산업 확대

2. [지역자율] 매칭 지방비는 지자체에 완전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원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Free-track으로 활용

- 주력산업 국비 균등 배분, 국비:지방비=6:4 비율로 지방비 매칭
 - * 13개 시·도(평균) 국비 112억, 지방비 75억, 세종시 국비 43억 지방비 29억
 - * 산업별 국비+지방비 지원 규모는 지역이 자율 구성
- 과제선정 시 지역 자율로 설정 가능한 “지역특화” 지표 신설(10점)
 - * 기술적 요소가 적은 무형 서비스 과제 평가, 지역산업/기업 여건 고려 등

3. [기업중심] 주력산업 유망기업을 지역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학-연 협업 플랫폼 기반 사업화전략 수립과 상용화R&D 지원

- 14개 시·도 지역스타기업 200개사/년 육성(~'22년, 1,000개)
- 지역스타기업이 중장기 사업화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역혁신기관이 지원하고, 우수한 사업화전략은 상용화R&D 연계 지원

참고7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개편내용

□ 14개 시·도 주력산업 구조조정 : 63개 → 48개(△15개)

□ 제조+ICT(7개→23개), 제조+서비스(7개→11개) 등 융복합 산업 확대

지역	현행 (2015-17년) 주력산업(63개)				
	바이오 의약 식품부티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정보 통신 서비스	에너지 환경
대전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차	금속가공	지식재산 서비스 무선통신 융합	
충북	바이오 의약	반도체	스마트 IT 부품	수송 기계 부품	태양광
충남	동물 식의약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디스 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세종	바이오 소재	자동차 부품			
광주	생체의료 소재부품	스마트 가전	복합 금형	초정밀 생산 가공 시스템	디자인
전북	건강기능 식품	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 소재		
전남	바이오 식품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 소재		에너지 설비
부산	바이오 헬스	지능형 기계 부품	초정밀 융합 부품	금형 열처리	디지털 콘텐츠
울산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정밀 화학	에너지 부품 환경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생산 기계	기계 소재 부품	항공	풍력 부품
대구	의료기기 소재기반 바이오 헬스	정밀성형		스마트 지식 서비스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경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모바일 융합	디지털 기기 부품	성형 가공	에너지 소재부품
강원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제주	물응용 헬스푸드			관광 디지털 콘텐츠	풍력· 전기차 서비스

→

개편(안) (2018년~) 주력산업(48개)				
바이오 의약 식품부티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정보 통신 서비스	에너지 환경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통신 융합	
바이오 헬스	스마트 IT부품	수송기계 소재부품		
바이오 식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 플레이		
정밀의료	첨단수송 기기부품			
디지털 생체의료	스마트 가전	광융합	복합 금형	
농생명 소재식품	지능형 기계 부품	해양 설비 기자재	탄소· 복합 소재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단 운송기기 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환경
바이오 메디컬	지능형 기계부품		지능정보 서비스	클린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조선양 해양	첨단 화학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 융합 부품	항공	
의료 헬스케어	첨단 소재부품			분산형 에너지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휴양 지식 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참고8

지역스타기업 육성

□ 추진목적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산업 대표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스타기업-청년인재 동반성장형 일자리 창출

□ 추진내용

2018~2022년, 5년간 지역스타기업 총 1,000개 육성



- 시·도별 지역스타기업 지정 : 연평균 15개/년(~'22년, 총 75개)

* 단 지역에 소재한 기업수가 적은 세종시는 5개/년(~'22년, 총 25개) 지정

< 연간 시·도별 지역스타기업 지정 계획(2018-2022년, 5년) >

지역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연평균
기업(개)	15	15	15	15	15	15	15	200
지역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기업(개)	5	15	15	15	15	15	15	

- 지역스타기업 맞춤형 지원 : 시·도당 연 10억원(국비 6, 지방비 4)

* 세종시는 연 4억원(국비 2.4, 지방비 1.6)

- 스타기업 전담 PM* 매칭을 위한 지역스타기업 사무국(TP) 운영

* 지역혁신기관(TP, 연구소, 대학 등) 전문가로 매월 방문 컨설팅 지원

- 지역스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촉진하는 산학연 협업 기반 사업화전략 수립 활동 지원 : 연 5천만원 이내, 최대 3년

- 지역스타기업 상용화R&D 지원 : 연 4억원 내외, 최대 2년